광주·전남 상생 '더디지만 차근차근'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상반기 회의…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광주 3순환도로 건설 협력 등 4개 과제 추가
남도학숙 부지 확정·혁신도시 전담조직 구성
'남도 방문의 해' 공동 추진 관광객 유치 협력

2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와 자문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광주·전남 상생협력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3일 광주시청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올 상반기 회의를 열어 자문위원(20명) 위촉장 수여와 14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에서 정했던 14개 과제에 광주순환도로 건설(제3순환선), 남도 방문의 해 추진, 광주·전남 농부장터 운영, 국제농업박람회 협력 등 4개 사업을 추가했다.

전액 국비로 3조6313억원을 들여 총 5구간 97.46㎞(4차로 도시고속도로)에 건설되는 제3순환선은 지난 1993년 첫 삽을 뜬 뒤 1구간(승촌~본량·14.85㎞), 3구간(진원~대덕·17㎞)은 이미 개통됐으나, 2구간 본량~진원 16.15㎞ 중 본량~남면간 10.3㎞만 우선 발주한 상태다.

이 중 남면~진원간 5.85㎞구간은 인근 주민들의 고속도로 건설 반대 민원으로 보류중이며, 4, 5구간은 장기 과제로 추진 예정이다.

시·도는 이번 상생 협약에서 2구간과 4~5구간의 빠른 건설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시·도는 제2남도학숙 건립을 중심으로 상생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제2남도학숙 건립 부지로 서울 은평구청 공유부지를 확정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도는 또 이날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중화동남아여행업협회 등과 함께 올해를 '남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협약 및 선포식을 가졌다.

시·도는 호남선KTX 개통, 2015광주하계U대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남의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국제농업박람회 등 남도의 관광 여건 변화에 따라 올해를 광주·전남 관광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활동,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자료 및 정보교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으로 '아트투어 남행열차' 운행(5월), 송정역~양림동 역사탐방~죽녹원에 이르는 관광상품을 이미 공동 개발했으며, 시·도 공무원 문화전당 탐방(5~7월), 수학여행단 유치(7~8월), 시·도립 예술단의 전당내 공연 등 문화주간 운영(10월)을 일정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도 성과를 내고 있다.

16개 이전 공공기관 및 광주시, 전남도, 시·도 교육청, 나주시 등 21개 기관 참여하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전 기관 조기정착 지원,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전담 지원조직까지 마련했다.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사업도 환경방사선 안전정보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는 한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으로 실시간 방사능 방재대책시스템 등도 구축하기로 하는 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양 시·도는 올 7월 열리는 2015 광주 U대회의 성공개최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시·도는 경기시설 20개소에 대한 개·보수공사를 비롯한 전남도 지원공무원 210명 선발, 성화봉송주자 530명 선발 등을 공동으로 진행중이다.

다만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조성 등과 관련된 시·도간 과도한 경쟁 해소, 광주공항과 연계한 무안공항 활성화 등은 상생을 위한 해결 과제로 꼽힌다.

이날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서로를 신뢰하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협력해야 한다"면서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혼자가 해도 절차가 필요한데 상생은 양 시·도가 함께하는 것이라 절차가 더 복잡하다"면서 "고대하는 마음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

朴대통령·존 필립 키 총리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방한 중인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FTA 정식 서명으로 양국 관계는 경제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인적 교류, 안보, 국제협력 이런 다방면에서 한 차원 더 높은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회담에서 "오늘 무엇보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에 정식 서명하게 되는데 양국수교 53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오늘 정식 서명되는 FTA를 발판으로 해서 양국 간에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욱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FTA 타결, 서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FTA 타결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장점도 많았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에 이렇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논의하겠지만 뉴질랜드와 한국 모두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해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박 대통령과 키 총리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타결을 전격 선언했으며,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한국 산업장관과 뉴질랜드 통상장관이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식 서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FT 정식서명 외에도 ▲수산협력 ▲방산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협력 ▲남극협력 등 경제성과를 도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농축산업 보완대책에 대해 "4월 중순께 영향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적절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의회 자동차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결

전국 처음…기술개발·기업유치 지원
자동차밸리·100만대 생산도시 탄력

광주시가 민선 6기 역점사업인 자동차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등 '미래 먹을거리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특정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국에서 자동차산업 육성·지원 관련 조례는 처음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236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의결돼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산업의 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지원계획을 담고 있는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사업자에 대한 애로 기술이나 신기반기술, 상용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이나 연구소 유치 및 육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포함해 지역 자동차 및 소재 부품업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집적화 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자동차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 자동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자동차 관련 기업이 입주하도록 했다. 자동차 산업 집적화를 위한 단지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도록 해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사업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기술인력 확보, 창업보육, 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 지역내 자동차 관련 업체의 역량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또 광주시장이 자동차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만들도록 책무까지 부여하는 등 자동차 산업 육성 지원에 집중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밖에도 효율적인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구성된 자동차 밸리추진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경종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장은 "전국 처음으로 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은 광주시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조성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